(2022-57) ○○○ 이의신청 요약 ('23. 2. 10. 결정)

■ 사실 관계

- 20XX.XX.XX. 신청인, 경상북도 ○○시 ○○동 소재 부동산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0조 제1호*를 적용하여 취득
 - * 노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
- 20XX.XX.XX. 처분청, 신청인이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‘직접 사용’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·고지
- 20XX.XX.XX. 신청인, 이의신청 제기

■ 쟁점 사항

-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통지기관에서 과세 예고통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

■ 신청인 주장

- “직접 사용”이란 ‘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’이므로 시설장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신청인에게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은 부당하다.

■ 종합판단 : 기 각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0조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시 추징한다고 규정하며, “직접 사용”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이며,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-518호에서 ‘직접 사용’이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서 설치자와 시설의 장이 일치하는 경우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,
-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, 처분청이 신청인들에게 노인복지시설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짐.